



보도자료 제 12/218 호
즉시 보도용
2012년 6월 12일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ashington, D.C. 20431 USA

2012년 IMF-한국 연례 협의(제 IV 조) 결과 발표문

호 이 코르(Hoe Ee Khor) 아태국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통화기금 협의단은 5월 30일-6월 12일 사이에 서울을 방문하여 2012년 제 IV 조 연례 협의를 수행했다. 이 협의단은 협의를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발표문을 발표했다.

“2010년에 강력한 회복세를 보인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추세에 따라 2011년과 2012년에 성장이 다소 완만해졌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약화된 세계 경제 전망을 반영하여 IMF의 기준 전망치인 3.5 퍼센트보다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 IMF는 금년도 성장률이 약 ¼퍼센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2012년 하반기의 경제 활동은 한국의 경쟁력있는 수출 부문과 최근에 종결된 미국 및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에 힘입어 완만한 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 측면에서는 시설 투자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는 높은 임금 인상으로 인해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 주요 하방위험은 유럽 위기의 악화와 관련이 있다. 유럽에 대한 직접적인 노출은 심하지 않으나, 이 지역의 취약성이 미국과 중국으로 과급되는 경우, 한국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2012년의 기준치는 예산의 전액 집행을 예상한 것이다. 선거 연도의 지출 증가를 억제하고 재정 상태를 계속 강화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은 매우 적절하다. 그러나, 한국의 견실한 재정 능력을 고려할 때, 세계경제가 상당히 악화되는 경우, 한국 정부는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재정적 조치를 취할 여지가 있다.

IMF는 한국이 장기적으로 긴축 재정을 운영하는 것을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정책은 필요한 경우 강력한 재정적 대응 조치를 취할 여지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하여, IMF는 2013년에 균형 예산(사회 보장 기금 수지 제외)을 달성할 계획을 환영한다. 미래를 전망할 때, 높은 사회복지 지출, 급속한 인구 고령화, 지정학적 사건과 관련된 잠재적 비용 등이 모두 장기적인 문제들을 보다 구조적으로 재정 정책 프레임워크에 통합하는 것이 여전히 최우선적인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사회복지 지출을 증가시키려는 한국의 의도는 특히 저소득층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적절하다. 사회복지 지출은 지난 20년 간 상당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꾸준한 속도로 증가시킬 여지가 있다. 이상적으로, 이러한 지출의 증가는 전반적인 재정 건전화 방향을 유지하면서 수행해야 하며, 이것은 우선순위가 낮은 분야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세입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혼합하여 실시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통화정책에 관해서는, 현재 수준의 정책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세계 경제의 둔화와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적절한 정책이다. 그러나 통화 정책 기조는 여전히 경기 순응적이고, 성장률이 현재의 완만한 수준에서 증가하는 경우, 인플레이션을 목표 범위 내로 유지하기 위해 2013년 초에 정책금리를 다소 인상할 수도 있다. 경제가 예측했던 것보다 상당히 더 위축되더라도, 한국은행은 2008-09년에 효과적으로 수행했던 것처럼 여전히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있다.

한국의 금융 시스템의 대외 취약성은 2008년 이후 상당히 감소했다. 이것은 단기 부채에 비해 높은 외환보유액, 은행의 대외 자금에 대한 낮은 의존성, 그리고 일련의 거시건전성 조치의 채택을 반영한다. 외환보유액은 현재 건전한 수준이고, 중국 및 일본과 체결한 양자간 스왑 라인에 의해 증가했다. 환율은 계속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개입해야 한다. 유로 지역의 위기가 악화되는 경우, 외환보유액은 외환 유동성을 지원하고 시장 상황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금융 시스템의 강화가 상당한 진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잠재적 취약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개방된 경제 중 하나로서, 변동이 심한 자본 흐름과 외화 자금 조달 위험에 높은 수준으로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IMF는 관련 당국이 꼬리 위험에 대한 비상대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고수준의 가계 부채는 상당한 기간 동안 우려되어 왔으며, 한국 정부는 이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최근에, 가구에 대한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대출이 급증했으며, 이러한 대출은 철저히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국은 이제 선진공업 경제국이다. 따라서 높은 잠재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은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노동 시장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향상 시켜야 한다(특히 서비스 부문에서). 노동력 참여율이 높으면(특히 여성) 보다 높은 성장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교육 및 의료 부문의 경쟁을 개선하고, 은행이 주도하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면 미국 및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규제 완화 조치와 더불어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다.”